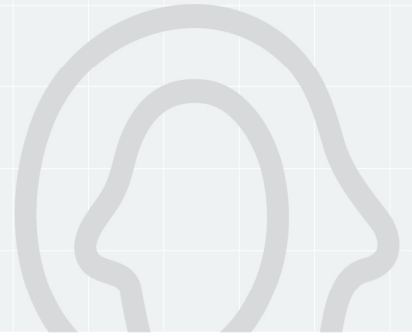


권두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집단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호불호를 떠나 우리는 남녀,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좌우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집단, 지역적 정서가 다른 집단 등 다양한 이질적 성향의 시민들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들 집단은 때때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와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 불평등할 경우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이는 조세 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연금개혁 등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세대 갈등 또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층, 세대, 지역, 성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일 수 있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는 이로 인한 나름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이

념 갈등은 분단국가의 아픔이 서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갈등의 심화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약화를 의미한다. 동전의 양면과 유사한 관계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은 집단 간 욕구와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욕구나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이가 크면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사회갈등이 드물게 사회발전에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의 사회통합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정치가는 정치적 안정의 조건으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사

회통합이 경제적 부와 성공의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병기(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통합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약화는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비정규직 등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면 노동시장 외적인 소득 보장 등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회갈등 해결에 필요한 민주적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여건 및 기반 조건들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성화가 집단 내 확증편향(confirmative bias)을 강화시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선거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성별·세대별 갈등, 지역 갈등, 이념적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개념 정의가 없다. 이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른 관심 문제 영역이 다른 점도 한몫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의하면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32). 독자들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정의 또한 추상성이 높기

는 때 마찬가지로 현학적인 개념 정의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개념 정의에서 한발 옆으로 벗어나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사회통합이 낮은 사회(사회갈등이 높은 사회)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공, 공공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조건, 삶의 기회, 빈부·소득·지대 등 각종 사회적 격차의 축소 등이 사회통합을 위한 물질적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격차가 그 사회의 수용도와 관련된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사회가 상당한 빈부 격차를 보이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는 사회통합에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은 그 사회의 격차에 대한 거부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시민들의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19 이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번 보건복지포럼의 기획 주제로 선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코로나19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 “한 사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되는 시점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 또는 사회적 위기의 상황과 일치한다”(김미곤 외, 2014:32)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였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한 바를 목도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화의 흐름도 되돌렸다.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자국 이익 우선주의, 성곽주의 등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공간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단절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등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집단 간의 대화, 교류, 타협, 협력, 참여 등의 기회를 줄였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 각 정책 영역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면 어떤 조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제언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방향을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하면 시민들이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영역별 개선 방안은 ‘이달의 초점’ 각론의 육고에 미룬다. ■

참고문헌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사회통합과 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기. (2008).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이론과 실증. **제도와 경제**, 4(1), 123-152.
-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No. 14)*.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